CEO Information

2005.1.5 (제483호)

2005년 국내 10대 트렌드

목차

1. 저성장 기조와 경제 우선
2. 개방 급물살과 마찰
3. 격차 확대와 구조조정 가속
4. 금융 주도권 다툼
5. 신기술·신업태 부상
6. 고실업 어려움 속에 노사상생 모색
7. 新제도 도입과 기업부담
8. 다원 사회로의 이동
9. 한국, 한국인의 재발견
10. 분수령 맞는 남북관계

작성 : 최희갑 수석연구원(3780-8062)
investa@seri.org
한창수, 김선빈 수석 외
감수 : 이언오 연구위원(3780-8101)
serileo@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요 약 》

2005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둔화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의 절상, 고유가와 고원자재가격이 지속될 것이다. 반면 개방, 개혁과 질서 변화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우리 나라는 쌀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동시 다발적인 FTA협상과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그 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던 각종 제도 개혁도 실행이 된다.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동북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당사국들간의 관계 설정이 이슈로 부상하고 남북한 교류도 늘어난다.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내수에 이어 수출도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2005년에도 계속된다. 이에 따라 기업 규모, 업종, 민·관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격차 확대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사회기반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경제 중시와 노사상생의 노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크다. 기업은 기업관련 제도의 개편에 대응하여 사회공헌과 '기업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대내외 경쟁 격화에 대해서는 인재 확보와 신기술·신업태 도전을 통해 재도약을 시도한다.

'성역과 금기'의 파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이어지겠지만 동시에 수평관계 지향, 다양성 수용 등 긍정적 흐름이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된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 해방과 분단 이후 60년,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 40년이 지났다. 그 동안의 성공·실패 경험을 되돌아보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IT산업, 월드컵 등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역동성을 확인한 바 있다. 2005년은 실용과 경제를 중시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근로절약 정신과 합리적 노사관계를 복원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 개개인이 모두 企業家라는 인식 하에서 起業報國에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 2004년 국내 경제 회고 》

□ 2004년 한국경제는 내수침체 지속과 대외여건 불안으로 어려움이 컸던 한 해

-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9개월만에 다시 하락세로 반전
  · 수출은 양호했지만 내수가 예상을 뛰어넘는 침체를 지속

-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체감경기가 냉각

- 대외여건 불안이 가중되어 수출 위협요인이 점증
  · 중국의 긴축정책과 고유가가 계속되었고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상으로 수출 급랭에 대한 우려가 고조

□ 정치와 정책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여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음

- 대통령 탄핵법안, 행정수도 이전법, 개혁법안 상정 등이 갈등을 유발

- 경제의 진로와 경제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
  · 성장전망, 성장과 분배간의 조화,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과 대안 등

□ 당 연구소가 2004년 초 예측했던 트렌드와 실제 상황은 대체로 일치

-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고 실업률이 상승
  · 2004년 초 일시 반등했던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
  · 가계부채 조정으로 소비감소→내수 침체→경기 부진이 이어짐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토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등 3대 특별 입법을 통해 국토공간의 재편을 도모
  · 단, 신행정수도법은 위헌 판정으로 2005년 상반기 대안이 결정될 예정

- 견조한 세계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수출 기업들이 약진했고 1강 2중 체제가 강화
  · IT산업의 호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제품들이 연이어 출시
  ·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건강, 친환경 등 웰빙형 상품이 호조를 보였음

- 대내외 정치·경제 환경은 불안이 지속되거나 답보 상태
  · 북핵 협상의 교착으로 남북관계가 다소 불안했고 정치가 계속 불안정
  · 연말 이상 고온으로 겨울의 계절성 경기가 부진했고 全지구적 구호활동을 요하는 초대형 쯔나미가 발생

- 당초 전망과 달리 정파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증폭

2004년 트렌드 예측과 실제 상황

	트렌드 예측	2004년 실제 상황	
경제 일반	경기양극화와 Jobless Growth	내수침체 지속으로 양극화 심화	○
	버블 수축과 가계부실의 진통	부동산 경기 냉각과 신용불량자 증가	○
공공	국토공간과 기능 재편	행정수도이전법 위헌판정으로 혼선	△
경영	1강 2중 체제	수출 호조로 선두업체가 약진	○
	디지털 프론티어의 확장	디지털 영상과 융·복합 시장이 확대	○
	웰빙 소비 확산	경기부진 하에서 웰빙형 상품이 선전	○
정치	정국 혼선과 경제부담	위헌소송, 개혁법안 등을 둘러싼 대립	○
	불안정한 남북관계	북핵 협상이 장기간 교착	○
사회 문화	사회갈등 봉합 조짐	정치적 갈등이 사회갈등 봉합을 저해	×
	재난·질병 대책 부심	연말 이상 고온과 지진해일 발생	△

주: ○는 전망과 실제 일치, △는 트렌드는 일치했으나 정도와 방향성 차이, ×는 불일치

《 2005년 국내 TREND 》

□ 2005년 경제여건은 획기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개방, 개혁과 질서 변화가 가속될 전망

- 세계경기의 둔화 속에 FTA체결 확대 등으로 대외 개방이 확대

- 기업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각종 제도 개혁이 본격화
  · 증권집단소송법 시행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
  ·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이 부동산 시장과 가계에 부담이 됨

- 동북아 질서 재편이 가속되고 당사국들간의 관계 설정이 이슈로 부상

□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 불안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됨

- 세계경기 둔화, 원화 환율 절상 등으로 내수에 이어 수출도 성장세가 약화

- 기업 규모, 업종, 민·관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진전
  · 금융산업은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효율과 서비스가 개선

- 저성장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노사협력이 중시됨

- '성역과 금기'의 파괴가 이어져 일부 혼란이 발생하지만 수평·다면 사회로 변모하는 긍정적 현상도 나타남
  · 정치권과 기업은 권위가 약화되고 수평조직으로 변화
  · 다양한 정치 이념과 가치관을 가진 주체들이 공존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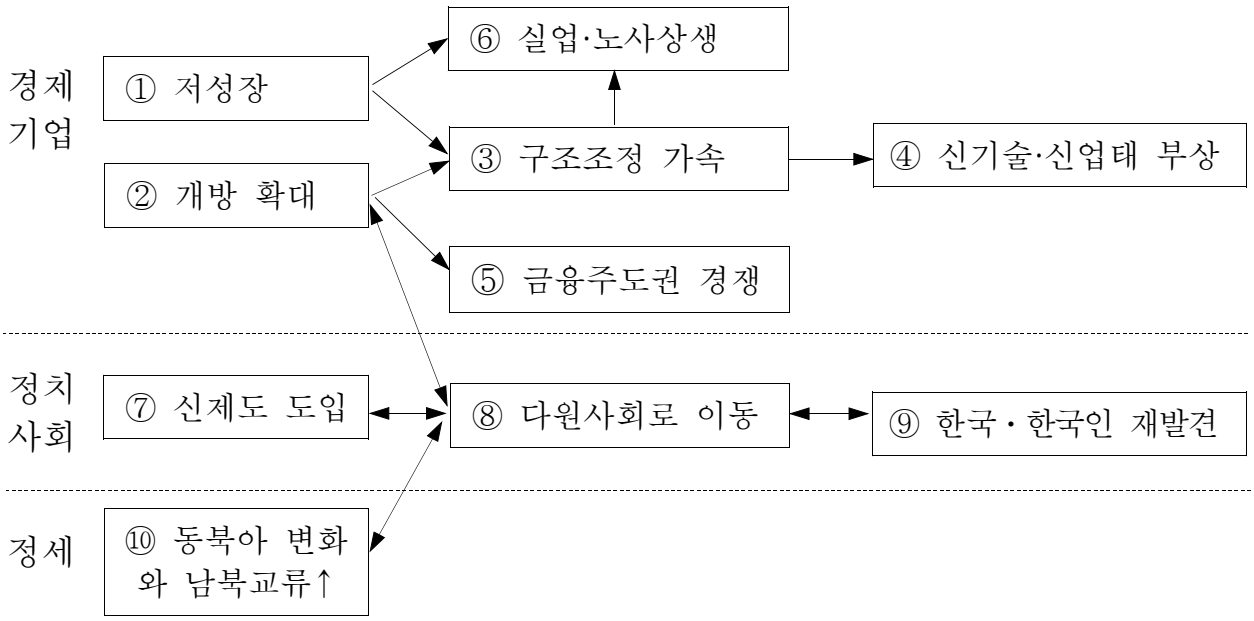
□ 2005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점이 됨

-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
  · 우리는 IT산업, 월드컵 등에서 고유의 역동성을 확인한 바 있음

- 경제를 중시하게 되면서 과거의 근검절약 정신과 협조적 노사관계가 일부 복원
  · 기업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사회적 공헌을 강화

- 혁신과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신기술·신업태에 도전

2005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



주: 1) 번호는 10대 트렌드를 표시
2) 경제와 기업은 일부 선순환이 기대되지만 정치사회 및 정세는 혼선과 돌발상황이 우려

1. 저성장 기조와 경제 우선

성장 둔화와 경제 복원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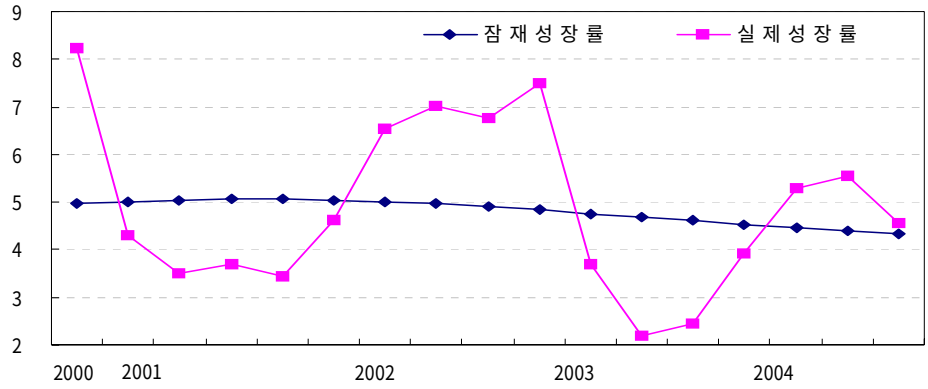
□ 2005년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저조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

- 최근 성장률이 경기 고점과 저점에서 모두 하락하는 추세

- 공급능력 감소와 수요 위축이 겹치면서 2005년 성장률은 3%대 후반에 머물 전망
  - 고령화,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생산인력과 자본스톡(R&D 포함) 모두 증가율이 낮아짐(잠재성장률이 하락)
  - 지난 3년간의 높은 수출증가율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나 중국, 미국 등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성장세가 둔화

- 원高, 高원자재가, 高복지비용 등 3高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및 실제 성장률 추이(%)



주: 잠재성장률은 HP필터[1]를 이용

□ 규제 완화 미흡, 고용 불안 등의 영향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지연

- 교육, 의료, 물류, 문화 등에 대한 규제와 개방 부진으로 서비스업의 경쟁력 개선이 답보

[1] Hodrick-Prescott이 개발한 것으로 시계열로부터 경기에 의존하는 순환변동치를 제거하는 방법

- 미래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연기 등 보수적 경영이 계속

- 소득계층간 양극화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

경제 올인과 사회통합 노력

□ 저성장에 따라 사회적 욕구보다는 경제적 욕구를 우선

- 2005년 우리 나라 국민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가계소득 증가와 경제적 안정'[2)]
  · 새해 소망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했던 '본인·가족의 건강'을 상회

□ 경제정책은 성장활력 재점화를 가장 중시

-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등 다양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천명

- 생산활동을 자극하면서 지속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추진

□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민생경제 악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통합 노력을 지속

-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

- 경제문제에 관한 한 정치적 대립을 자제하고 초당파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2)] 한국 갤럽이 우리 나라 전국 성인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4일간 조사한 결과

2. 개방 급물살과 마찰

동시 다발적 FTA체결과 서비스·농업 시장 개방

□ 한-싱가포르 FTA의 발효, 일본과의 FTA 최종협상 등 FTA를 통한 개방 노력이 본궤도에 오르게 됨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각각 2005년과 2006년 타결을 목표로 하여 협상을 진행
  · 미국과 예비 실무회의를 시작하고 멕시코, 인도,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과는 본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 WTO 다자간 협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하여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확대

- 2005년 12월 WTO의 도하개발아젠다 다자협상이 재개되어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본격 논의될 예정

- 의료시장이 부분 개방되는 데 이어 교육 등 타 서비스도 개방이 확대
  ·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

□ 농업과 수산업의 시장개방이 본격화

- 2005년부터 수입쌀의 10%가 시중에서 판매되며 이 수치는 2010년까지 30%로 높아짐
  · 관세화를 10년 유예하는 대신 의무 수입물량을 과거 4%에서 8%로 상향 조정

-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싱가포르산 수산물 406종 가운데 56종의 관세가 철폐되고 나머지 어종의 관세율도 점차 인하

□ 인력의 국경간 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의 개방이 급진전

- 2004년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
  · 특히 중국과의 교역확대, 일본 내 한류 붐으로 인해 중국, 일본과의 인력 유출입이 급증

- 외국기업의 R&D 센터 설치가 늘어나면서 고급인력 유입이 증가

개방으로 사회 마찰이 발생하고 경쟁력·투명성이 높아짐

□ 대외경쟁력이 낮은 분야가 개방되면서 사회적 마찰이 발생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

- 농·수산업과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낮아 개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일 FTA 추진 과정에서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반발이 예상

-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증가
  · 정부는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80kg)과 당해 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0%를 보전해주기로 결정

□ 서비스업 등의 개방은 내수 촉진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서비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3배 이상이어서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는 단기간에 고용증가로 이어짐

- 서비스업 개방은 관련 부문의 효율과 투명성을 높여서 수출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줌
  · 특히 교육, 법률,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업의 개방이 산업경쟁력과 직결

3. 격차 확대와 구조조정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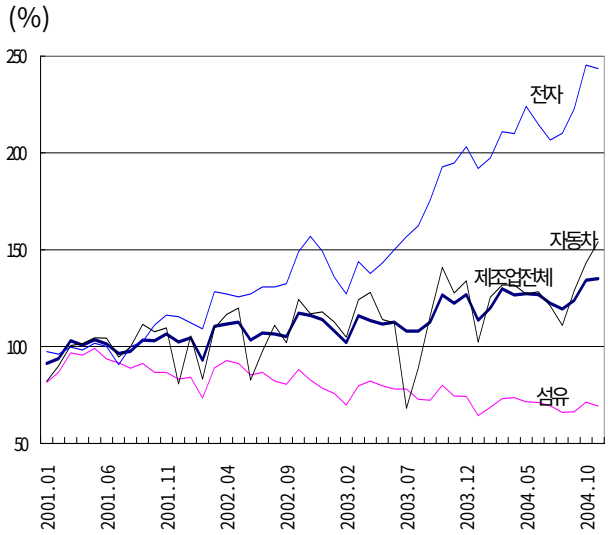
산업간·기업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IT 등 성장산업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기업간 격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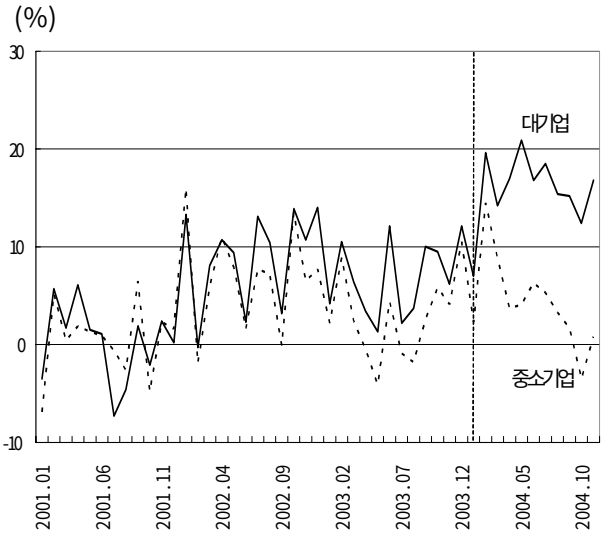
- 반도체, 정보통신 등 IT산업의 실적이 전산업의 성과를 좌우
  · 성장산업 보유 여부에 따라 기업실적과 지역경제의 명암이 결정됨

- 대·중소기업간 성장률 격차가 확대
  · 대·중소기업간 생산지수 증가율 차이(전년동월비) : 2.0%p(2003년 11월) → 16.0%p(2004년 11월)

산업별 생산지수(2000년=100)



생산지수 증가율(대기업vs.중소기업)



주: 생산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광공업동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조조정이 가속되고 성공사례들이 돌출

□ 우량 기업들 조차도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어야만 살아 남는 超경쟁 시대가 도래

- 상위기업들은 의도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조직 내 긴장을 유지

- 업계 랭킹이 하위이거나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더 이상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게 됨

중견기업들의 구조조정

- 2004년 12월 아남전자는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TV사업에서 철수하고 오디오, DVD복합제품, 셋톱박스 등 멀티미디어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발표

- 코오롱은 원료가 상승, 중국 공세 등으로 채산성이 떨어진 섬유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고부가섬유, 자동차·전자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구조로의 변신을 추진

□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등을 통해 구조조정 여건을 조성

- 코스닥시장의 가격변동폭을 확대하고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퇴출유예기간 설정, M&A절차 개선 등을 실시

- 등록 취소, M&A, 기업분할 등에 따라 상당수 벤처기업들이 퇴출됨
  · 2004년 코스닥 퇴출기업 36개 중 27개가 벤처기업

□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등장

- 개혁적 CEO와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
  · 대우종합기계, 넥센타이어 등은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어려움을 극복

-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경험을 자산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강화

4. 금융 주도권 다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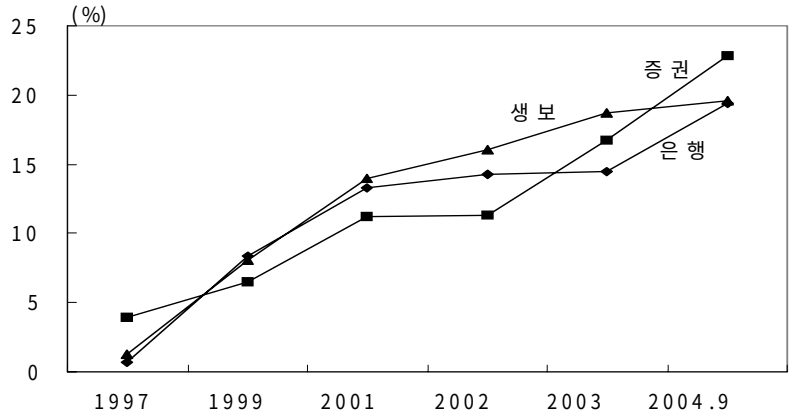
국내외 금융기관간, 은행과 제2금융권간 경쟁이 격화

□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영업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이 격화

-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시장점유율을 현재 6~7%에서 10%까지 높일 방침

- 외국사들이 증권과 보험에 이어 자산운용업에 본격 진출

외자계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 추이



주: 은행은 원화예수금, 증권사는 거래대금, 생보사는 보유계약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증권거래소, 주식,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 그 동안 은행권이 금융산업 재편을 주도했으나 2005년 이후 제2금융권의 반격이 거세어질 전망

- 제2금융권은 업무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
  · 통합금융법[3] 제정을 앞두고 각 금융권의 업무영역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됨

[3] 통합금융법은 현재 은행, 증권, 보험 이외에 자산운용업, 선물업, 여신전문금융업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 금융업 단위를 최소 전업단위만을 제외하고 통합하기 위한 법률로서 2007년에 시행될 예정

□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는 중소 금융기관들은 합병되거나 퇴출당함

- 중소형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시장 위축과 신규 수익원 발굴 애로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

-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증가하면서 비은행계열 보험사들이 위축

금융서비스가 개선되고 자금흐름 왜곡이 일부 시정

□ 금융기관들의 공격적 영업으로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다양화

- 거래수수료 인하, 우량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등이 확산
  · 2002년 사이버 증권거래가 확산되자 증권사들이 수수료율을 0.5%에서 0.1~0.025%로 대폭 인하한 바 있음

- 새로운 금융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
  · VIP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부동산 등을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신규고객 확보 경쟁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활성화되는 등 자금흐름의 왜곡이 일부 시정

- 은행들은 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서 신용대출을 확대

- 대기업의 자금수요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유망 중소기업 등 신규 대출수요를 창출
  · 기업은행은 3,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

- 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IT투자를 확대

5. 신기술·신업태 부상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상용화가 급진전

□ 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며, 디지털 기술의 응용 영역이 사회인프라 등으로 확장

- 상온에서의 탄소나노튜브의 양산기술이 확보되어 실용화가 급진전

- 저궤도 위성발사체 개발, 우주센터 건설(전남 고흥) 등이 추진됨

- IT를 도로·교통 관리, 방범·방재 등 공공시스템 운영에 접목

□ 정보간·기기간 융복합에 이어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융복합이 가속됨

-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라 홈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융복합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대중화
  · 현대자동차는 2004년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 클릭' 50대를 시험 생산했으며 2005년 말 상용화할 계획임

- 異업종간 경쟁이 격화되고 고부가화를 지향한 '+0.5차'가 각광받음

2005년 상용화될 융복합 제품과 서비스

융·복합 개념	분야	제품·서비스
정보간·기기간 융복합	· 환경+자동차+전자 · 융복합 IT기기	· 하이브리드카 · 700만 화소 TV폰
네트워크·서비스 융복합	· 휴대폰(통신)+방송서비스 · 산업+네트워크+서비스 · 통신+의료+서비스	·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 모바일뱅킹,모바일유통(시범사업) · e헬스케어

기존 유통업태의 융복합화와 함께 신업태가 고성장

□ 기존 유통업체들은 융복합화와 소프트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

- 할인점은 원스톱 쇼핑을 강화하면서 자체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

- 백화점은 영화관, 스파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하고, 인터넷 쇼핑몰은 개인 판매자들에게 미니홈피 형식의 공간을 제공

□ 카테고리킬러 등 신유통업태가 고성장

- 특정 품목에 대해 충실한 서비스와 다양한 가격대를 제공하는 카테고리 킬러들이 급부상(디지털 편의점, 건강·뷰티 전문점 등)

- 기존 업태들의 틈새를 겨냥한 슈퍼슈퍼마켓[4], 명품 아울렛 등이 등장

기업가형 창업으로 자영업의 활로를 모색

□ 생계형 창업이 퇴조하는 반면 기업가형 창업이 증가

- 준비된 창업자들이 기업가정신과 경영역량을 갖고서 자영업에 도전
  · 경쟁력을 상실한 자영업과 프랜차이즈는 구조조정이 진행됨

2005년 자영업 유망업종

성장단계	도입기	성장초기	성장후기	성숙기
키워드	건강·문화·교육	웰빙·여성	가격파괴·전문화	음식·전문화
업 종	· 빅사이즈 의류 전문점 · 음이온 환경사업 · 셀프다이어트방 · 중저가스파전문점	· 원석주얼리전문점 · 피부관리실 · 유기농산물전문점 · 광촉매코팅업 · 천연화장품전문점	· 가격파괴 삼겹살 전문점 · 죽까페 · 매운닭 요리점 · 가격파괴 치킨점	· 반찬전문점 · 참숯가마 삼겹살 · 요구르트·아이스크림 전문점 · PC방 · 남성미용전문점

자료: 한국창업전략연구소(www.changupok.com)

[4] 비용 절감, 브랜드력 제고 등을 통해 체인스토어의 장점을 살리면서 식품류 구색을 강화한 소규모 지역밀착형 업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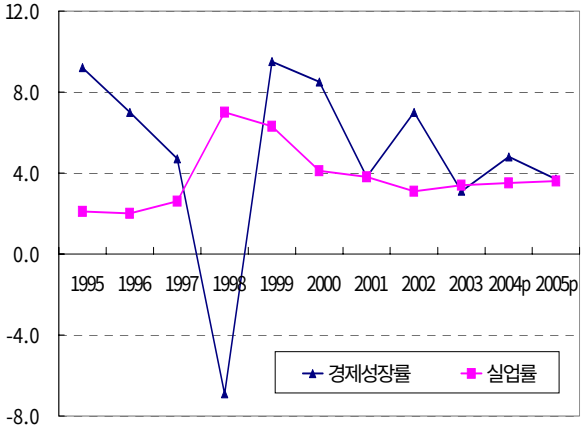
6. 고실업 어려움 속에 노사상생 모색

실업증가, 취업난 등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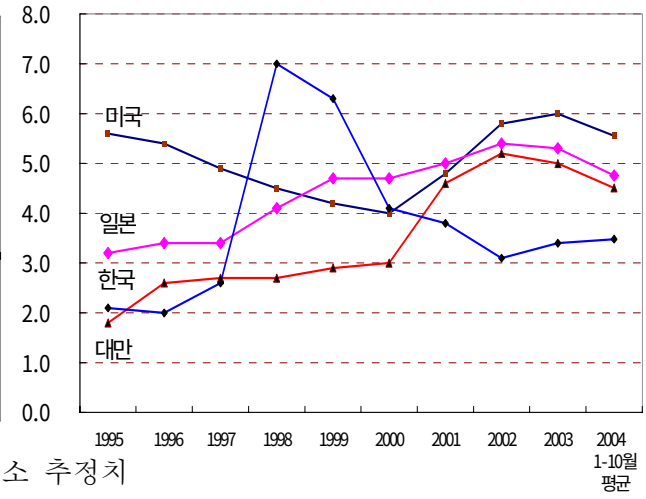
□ 경기 회복 지연, 고용 절감 노력 등으로 고실업의 어려움이 지속

-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2004년보다 높은 3.6%를 기록
  -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용규모를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
  - 미국, 일본과 대만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변화



주요 국가의 실업률 변화 추이



주: 2004년, 2005년 통계치는 삼성경제연구소 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인해 체감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

- 자영업 운영난 심화로 관련 종사자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취업난이 가중
  - 2004년 11월 현재 남성 자영업주 수는 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여성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12만 명 감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대책과 사회적 협력 강화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추진

- 단기적으로는 고용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취업자 연수 기회 확대 등에 주력

- 임기응변적 실업대책의 유효성에 대해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고, 성장동력 확충 등 고용창출을 위한 근본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가시화

- 기업들은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고학력 미취업자, 소외계층 등의 채용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고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

- 시민단체는 복지, 자원봉사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주도

노동운동은 합리와 상생을 지향

□ 노사정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시도

-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FTA 추진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은 노사정 대표간의 대화와 협력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

□ 과격 투쟁이 퇴조하고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

- 대화와 타협, 정책 참여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합리적 노동운동이 점차 보편화
  ・노동계 내부에서도 과격투쟁위주 노동운동에 대한 자성이 대두

"경제 상황과 취약근로자, 공익을 배려하는 성숙하고 열린 노동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 2004.12.20 머니투데이)

"노동자가 책임있는 경제주체라면 합리적 노동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 2004.12.10 한국경제신문)

7. 新제도 도입과 기업부담

증권집단소송법과 新공정거래법의 시행

□ 집단소송법 시행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한 소송위험이 증가[5)]

- 2004년도 회계보고서가 제출되는 2005년 2월 이후 집단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며 이 때문에 기업들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이 될 가능성
  · 최근 5년간 주요 기업 공시 중 오류정정 비율이 24.6%에 달함

- 올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과거 분식에 대한 면책 여부가 논의될 예정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따라 대기업 집단의 경영권 방어능력이 약화

- 12개 대기업집단의 출자 총액이 계속 제한되며, 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현재 30%→2008년 15%)

도입(예정)된 기업활동 관련 제도

제도명	대상기업	파급효과
증권집단소송법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등록법인 82개사	소송결과가 기업 존폐에 영향
新공정거래법	12개 대기업 집단	외국인과 국내 소액주주가 연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경영권을 위협(방어수단 한계)
기타 검토 중: 소비자단체소송, 식품분야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전체 기업	기업 부담이 한층 증가

[5)] 집단소송법은 의도적인 정보 왜곡, 부실 감사 등으로 발생한 유가증권 거래상의 피해에 대해 일부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면 다른 주주들도 소송 절차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기업들은 新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

□ 기업들은 제도적 환경 및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 경제적 제도가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對사회 상생 노력을 배가

- 복지 수요의 급증에 부응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 양극화, 고령화, 가족 해체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反기업 정서의 해소를 위해 '기업 알리기'를 적극 전개

□ 거래소 상장을 폐지하는 기업이 생겨날 가능성

-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규율, 주가 관리, 배당 이익 추구 등의 경향이 강해 짐
  · 2004년의 경우 주식시장에서 기업으로 유입된 돈(4조 9,635억 원)이 기업에서 주식시장으로 유출된 돈(14조 1,507억 원)을 크게 하회[6)]

□ 적대적 M&A의 위협 등에 대처하여 기업간, 기업과 기관투자자간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짐

- 공통의 이해 기반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서 자구책을 강구
  · 최근 국내 기업과 채권 금융기관들이 외국 펀드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고 있는 SK(주)의 주식을 매입하고 우호적 협력자 역할을 자임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한도가 늘어나 국내 기업의 대외 방어를 지원

6) 유출은 현금배당+자사주 매입, 유입은 기업공개+유상증자에 의해 발생

8. 다원 사회로의 이동

수평적 사회관계의 확산

□ 정치권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약화되고 네트워크형 양상을 띠게 됨

- 역량 있는 인사들이 파벌과 選數(당선 회수)를 뛰어넘어 지도부에 참여

- 정당간 경쟁이 정책 중심으로 바뀌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형 전문가들이 부상

□ 국민들의 수평사회 지향에 부응하여 헌신·봉사하는 '섬기는 리더십'이 부상

- 권위적·통제적 리더십이 퇴조하는 반면, 명령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기는 리더십'이 확산
  ·성취 기준을 높이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엄격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7]

-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지배구조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서구적 합리성과 성과중심 조직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됨

다양성을 수용하는 中道的 흐름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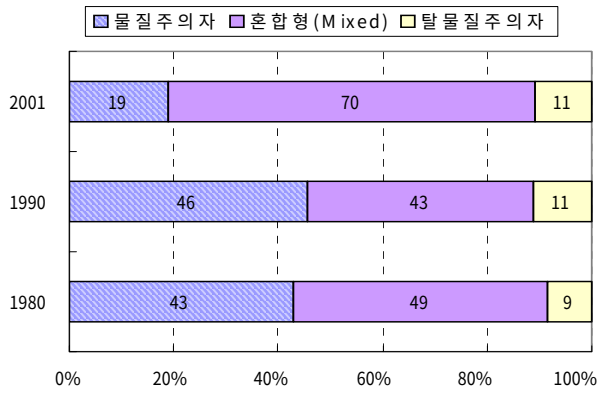
□ 가치관이 '탈물질'과 '참여' 지향으로 변화

-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혼합형 가치관이 주류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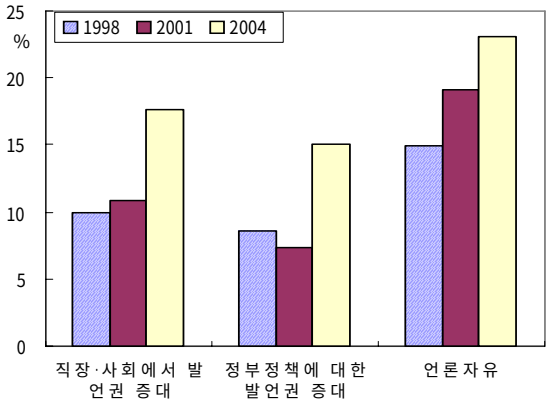
- 국가목표 설정, 정책결정, 조직운영 등에 있어 개인의 참여를 중시

[7] 켄 제닝스·존 슈탈-베르트 저, 조천제 역,(2004), 「섬기는 리더」, 넥서스BIZ.

탈물질 중시의 가치관 변화



참여 중시의 가치관 변화



자료: 미시간대학교 국제가치조사(각 연도), 한겨레신문 여론조사(2004.5.18)

□ 사회갈등과 대립을 봉합 및 완화하려는 중도적 흐름이 두드러짐

-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을 우선하는「求同存異[8](search for common ground)」의 시스템 창출을 위해 노력
  ・'하나의 최선의 길(one best way)'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함께 추구

- 정치권은 실용적 중도 성향의 정책을 선택하고 갈등을 회피
  ・갈등조정을 위한 통합법제(갈등관리기본법)가 도입될 예정

- 시민단체들은 사회기업 참여, 나눔 운동 전개 등을 통해 갈등 조율과 사회통합에 나설 전망

□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심들이 키워드로 부상

- 지역공동체, 생태환경, 소집단의 유대 등이 시민운동의 테마로 등장

- 개인의 정신적 행복을 보다 중시
  ・'부자' 키워드가 퇴조하고 '웰빙', '명상', '느림의 미학' 등이 부상

[8] 求同存異는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가 한 말로서, "이견은 일단 미뤄 두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분야부터 협력한다"라는 중국정부의 실리추구정책을 의미하는 4자 성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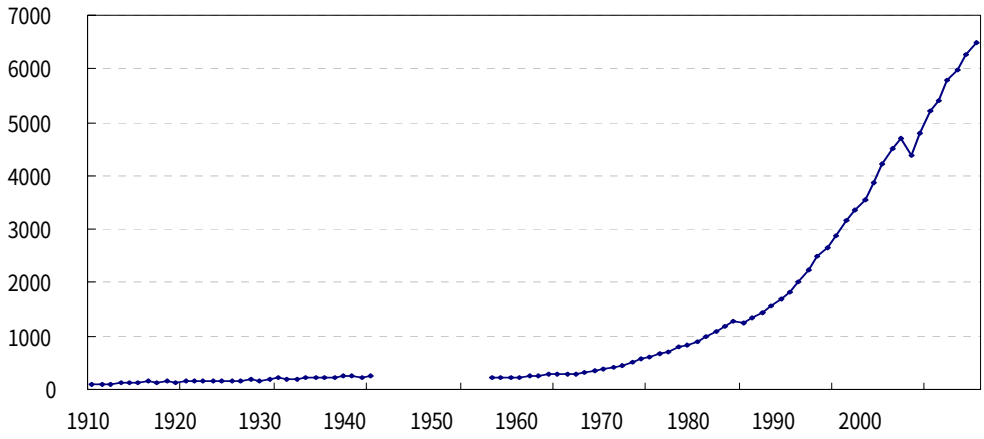
9. 한국, 한국인의 재발견

2005년은 을사조약 100년, 해방 60년의 의미있는 해

□ 2005년은 을사조약 100년, 광복 60년이 되는 해로서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

- 식민과 분단이라는 20세기가 남긴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
  - 정부의 과거청산 의지, 국내기업의 글로벌 브랜드 창출, 한류열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1910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궤적(1910 =100기준)



주: 1910~1940년은 총재화순생산액, 1953년 이후는 GDP기준
1940~1952년은 전쟁과 광복에 따른 혼란으로 통계가 부정확
자료: KDI, 한국은행, Sang-Chul Suh[9)]

□ 각 분야에서 한국과 한국인을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전개

- 참여정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실용적, 현실적 노선이 부상

- 민주화, 글로벌화, 디지털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한국인像을 추구

9)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Korean Economy*, 1978, Harvard Univ. Press

・정치적 민주화, 경제성장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확립

새로운 자의식(自意識)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회복

□ 글로벌 경쟁에서의 성취를 통해 한국인의 가능성을 재발견

- 경영, 스포츠, 문화 등에서 이룩한 뛰어난 성과가 한국사회가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 가능함을 시사

- IT 등 지식기반 신산업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유목민 DNA'의 강점을 확인
  ・농경사회, '조용한 아침의 나라' 등의 이미지를 탈피, 역동적인 IT강국로서의 이미지를 정립

□ 글로벌화, 개방화를 통해 확보한 폭 넓은 안목으로 자아를 새롭게 성찰

- 해외여행 증가, 조기유학, 이민증대 등이 세계와의 접촉빈도를 높였고 이는 글로벌 시각으로 한국과 한국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서구식 일변도의 접근을 지양하고 한국적인 모델과 방법론을 발굴

-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적 자의식의 해체와 재형성을 경험
  ・강제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됨

- 정치, 경제, 경영, 법・제도,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적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발견

10. 분수령 맞는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

□ 북핵문제에 대해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법이 부재한 상태가 지속

- 부시 행정부는 외교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며 북핵문제를 6자회담에서만 다룰 전망

- 북한은 북미간 양자 회담을 고수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타협을 거부

□ 북핵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동북아 지역의 탈냉전화가 지체

-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 북방 3각이 남방 3각(미국, 일본, 한국)과 대립하는 新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북핵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6자회담을 다자간 협력안보체제로 발전시키자는 논의가 활발

동북아 新냉전 가능성에 대한 견해

	낙관론	우위	비관론
정치	· 중-러 관계는 동상이몽	=	· 중-러가 40년만에 국경분쟁 합의
경제 교류	· 역내 경제협력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 · 러시아, 중국 모두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하게 필요	>	· 동북아 에너지 자원 갈등이 심화 · 러시아는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 확장 시도를 비판
군사	· 북방 3각 對 남방 3각 구도는 미국의 반테러전 기조 하에서는 무의미 · 북핵문제는 비확산문제일 뿐임	<	· 미국이 MD구축 등을 통해 對북방 미군배치를 강화 · 일본은 "新방위대강"에서 최초로 북한-중국을 안보위협요인으로 규정 · 중-러, 합동군사훈련에 처음 합의

남북 대화와 민간 교류가 再활성화

□ 북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대북 이니셔티브가 본격 거론

-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의사를 표명
  · 광복 60주년, 6·15 5주년 등을 계기로 대규모 정치이벤트가 추진될 가능성

- 한국과 북한의 정부간 교류에 대해 미-일의 우려가 증대
  · 미국은 남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전망이며,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 남북관계가 상당 수준 복원되어 각종 회담 및 교류가 재개

- 북한이 2004년 7월 조문파동 이후 중단되었던 각종 회담을 재개하고 방북을 재허용할 가능성

- 그 동안 중단되었던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도 다시 활성화
  · 금강산에 이어 백두산 개방 논의도 본격화

□ 남북경협 방식이 다양화되며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

-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본격 가동되면서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
  · 전략물자 반출, 원산지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

- 직교역 본격화, 경의선 개통(2005년 말 예정) 등에 따라 경제교류가 상승세를 탈 전망
  · 남북 거래성 교역규모는 1999년 1억 9천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5천만여 달러로 증가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12. 28	12. 29	12. 30	12. 31	1. 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1,042.4	1,041.0	1,041.8	1,035.1	1,038.1
	엔/달러	103.0	103.2	103.7	102.6	102.8
금리	회사채(3년AA-, %)	3.74	3.73	3.73	3.72	3.82
	국고채(3년, %)	3.29	3.28	3.28	3.28	3.38
주가지수(KOSPI)		878.4	884.3	895.9	..	893.7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2년	2003년	2004.7월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7.0	3.1	..	..	4.6	..	..
민간소비	7.9	-1.4	..	..	-0.8	..	..
설비투자	7.5	-1.5	..	..	6.7	..	..
산업생산	8.0	5.1	13.0	10.6	9.5	5.8	10.1
평균가동률	78.3	78.4	79.4	78.7	79.6	80.1	82.0
실업률	3.1	3.4	3.5	3.5	3.2	3.3	3.3
실업자(만명)	(70.8)	(77.7)	(81.4)	(80.1)	(74.7)	(77.2)	(77.9)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8	0.04	0.05	0.05	0.06	0.05
소비자물가상승률	2.7	3.6	4.4	4.8	3.9	3.8	3.3
수출(억달러)	1,624.7	1,938.2	210.0	197.9	208.3	226.6	231.3
(증감률)	(8.0)	(19.3)	(36.1)	(28.7)	(22.4)	(19.7)	(26.8)
수입(억달러)	1,521.3	1,788.3	183.9	181.1	181.9	203.6	203.7
(증감률)	(7.8)	(17.6)	(23.4)	(33.7)	(25.2)	(23.1)	(29.2)
경상수지(억달러)	53.9	123.2	32.3	10.6	28.1	24.0	29.4
외환보유액(억달러)	1,214.1	1,553.5	1,680.1	1,704.9	1,744.5	1,783.9	1,926.0
총대외지불부담 (억달러)	1,439	1,589	..	..	1,667	..	..